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15∼19일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이 일·한·중 3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 냈다.

첫째, 한국을 경시하는 언행이 눈에 띈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 관계에 있어 일본은 핵심축(linchpin)이고 한국은 주춧돌(cornerstone)인 셈이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느낌이다.

틸러스 국무장관은 일본 기시다 외상과 만찬을 함께했다. 한국의 외교장관과는 만찬을 하지 않았다. 만찬을 함께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이다. 초청국인 한국이 의전에 대해 실수한 것일 수도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2개월 후면 끝날 것이라는 것이 만찬 불발의 요인이라면 한국 경시의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종교칼럼



조발그니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탄핵이 인용됐다. 서울에 살지 않아서인지 태국기를 들고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다만 지면이나 티비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보게 된다. 정교분리란 정치와 종교, 혹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현대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해 권력과 종교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 20조는 우리나라 국민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는 종교적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교분리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도를 하거나 대한민

기 고



정 순 복
광주시 건강정책과장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883년 3월 24일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가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 되던 해인 1982년에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결핵의 날’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해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결핵은 기원전 7000년 선사시대 사람의 뼈에도 그 흔적이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아주 오래된 질병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감염병이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

안갯속의 한반도 정세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근간을 흔들 만큼 북핵의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판단일 수도 있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묵인한 사례가 있다. 이중 잣대에 의한 핵보유국 묵인과,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냉전시대의 인식이 잔존하는지 의심스럽다.

셋째, 새로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가 실패했음을 분명히 했다. 전략적 인내의 핵심은 한·미·일·중이 공조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이다. 압박 공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압박의 강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포괄적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괄적인 조처 속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접근이 있는지 불명확하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나쁜 행동의 기준도 없고 군사적 대응의 범주도 분명치 않다. 유엔헌장에는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에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직접적인 침략 행위가 아니므로 경제적 제재로 제한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의 언행에 중국과 북한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의 본질은 중국이 아니라 미·북 간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실패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돌아와야 함을 강조했다. 미·북·중 3자회담을 제안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쌍 중단’(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을 제안하고, 대화의 의제로는 선결조건론이 아니라 ‘병행론’(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논의)을 제의했다. 북한은 틸러스 장관의 방중 기간에 신행 로켓 엔진시험을 실시했다. 조만간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국에는 자 주성을 보여 주고 미국에는 맞대응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4월의 한반도 정세 전망은 먹구름이다. 4월 초순 미·중 정상회담이 1차 분수령으

로 예상된다. 사드·북핵·평화체제 등 한반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 간의 불신과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2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이 2차 분수령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인민군 창건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군 창건 85주년의 축포로 활용하기 위해 핵실험·인공위성 발사·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예상된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미·중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남북한은 이방인이 된다. 한반도의 운명을 미·중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사드 장비의 반입을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 중국은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김정은 체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정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의 잠정 중단 선언으로 화답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 사안을 포함한 직접 담판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5월이 되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윤곽이 잡힐 듯하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남북·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

는 대북정책’을 펼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평화통일도 그리 먼 날은 아닐 것이다.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

국을 신에게 맡긴다며 구국기도회를 하는 것은 그래서 우스운 일이다. 그런데 태

극기를 들고 전 대통령 자택에서 집회를 하는 이들은 정치를 신격화시켜버린 것 같다. 합리나 이성이나 아니라 맹목이며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과백발아 보여안타깝다.

국민 다다수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이 일치해 파면한 대통령을 왜 그리 따르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난 믿음에 대한 배신이 더 어려워져 그러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로인해 이미 그들과 우리는 분리돼 있다. 한시대와 한나라를 사는데도 그들과 우리는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장미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마다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책을 논하며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무엇이 최선이여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에도 정책에 대한 공방 전에 인공신격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검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자신들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가 더 먼저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는 바람이다.

그러나 갈등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런 말을 하신다.

“갈등은 무시하거나 덮어 버릴 수 없습니다. 갈등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갈등의 뒷에 갇힌 채 그대로 머물면, 우리는 전망을 잃어버립니다. 지평은 제한되고 실제 자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갈등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실재의 심오한 일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갈등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 길을 갑니다. 그들은 자기를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여기서 손을 떼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갈등 속으로 들어가 그 포로가 된 채 방향 감각을 잃고 그들 자신의 혼동과 불만을 제도에 투사하여, 일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 의 길도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에 대처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곧 갈등은 기꺼이 받아들여 해결하고 이를 새로운 전전의 연결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226-227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3의 길이

차이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2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이 2차 분수령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인민군 창건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군 창건 85주년의 축포로 활용하기 위해 핵실험·인공위성 발사·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예상된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미·중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남북한은 이방인이 된다. 한반도의 운명을 미·중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사드 장비의 반입을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 중국은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김정은 체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정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의 잠정 중단 선언으로 화답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 사안을 포함한 직접 담판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5월이 되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윤곽이 잡힐 듯하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남북·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

는 대북정책’을 펼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평화통일도 그리 먼 날은 아닐 것이다.

다. 국민을 갈라놓은채 내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국정교과서, 위

운 해고, 위안부 합의, 탄핵, 국정농단 등등 이 정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 국민을 갈라놓았다. 국민과 국민을 갈라놓는 것은 식민지 제국이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다. 우리는 이 갈등을 모른척하거나 그 안에 파묻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3의 길을 택해야 한다. 갈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이 갈등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연대와 평화가 필요하다.

“연대는 그 가장 깊은 의미에서 그리고 도전과제로서 역사를 일구어 가는 방식이 됩니다. 역사는 갈등과 긴장과 대립이 다양한 형태의 일치로 연대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이며, 여기에서 새로운 삶이 태어납니다.”(228항)

“평화의 전갈을 협상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치가 모든 다양성을 조화시켜 준다”는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230항)

교종 프란치스코의 말씀을 다시 새긴다.

社 說

세월호 인양...이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1073일 만에 물 밖으로 올라온 세월호의 모습은 처참했다. 선체는 곳곳이 굵고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은 먹먹한 가슴 부여잡고 눈물을 삼켰다. 참사 3년 만의 인양. 참 오래 걸렸다.

진도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 있던 유가족들도 새벽부터 진도에 내려가 인양 작업 소식에 눈을 떼지 못했다.

물로 올라온 세월호는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고 10여 일 뒤면 선체 조사가 진행된다. 9명의 실종자 수습과 함께 진실 규명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선체 인양과 함께 진실의 인양만이 원혼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막는 길이다.

이제부터 진상 규명과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시작됐다. 당장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세

도가니 피해자 학대 5년간 아무도 몰랐다니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새로 열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5년 동안 폭행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교행복빌라 장애인시설 섀다운(Shut Down) 대책위원회’와 광주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30명 중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19명이 가교행복빌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해당 시설 대표 이 모(여·50) 씨는 이들을 포함한 원생들에게 고통이 핀 빵을 간식으로 지급하거나 여름·겨울철에 냉·난방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장애인을 강제로 붙잡아 머리카락을 자르고 집기로 폭행한 것을 비롯해 세차·빨래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광주시 보조금과 장애인 연금 등을 제주머니돈처럼 썼다. 옷과 골프화 등을 저 사들여 빼돌렸다. 그는 시설장 마 모

(여·48) 씨 등 일부 직원과 함께 근무 시간에 주름 개신, 보톡스 시술을 받기도 했다. 이 씨가 빼돌린 보조금 등은 한 해에만 무려 9억9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태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광주시와 북구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의 정기 현장 점검은 서류 검토 등 지극히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북구청은 공익 제보자들이 지난해 9월 피해 사실을 인권단체에 제보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았지만,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광주시와 북구도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광주시와 자치단체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장애인 시설 일제 점검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대부분의 중국 역관장자들은 거위나 마천거사다. 자신들이 구축한 정치적 ‘관시’(關係)와 공산당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통해 살을 찌우지만, 언제든 때가 되면 공산당 황제(Emperor)의 결정에 따라 푸아그라(foie gras)를 내놓아야 한다.”	국 갑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갑부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앞으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요원이 지난달 1일 홍콩 포시즌호텔에서 홍콩의 부호인 사오젠화(46) 명텐(明廷)그룹 회장을 납치한 데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해설 기사다. 귀한 요리 재료인 푸아그라는 거위의 ‘살진 간’으로, 거위의 몸에서 가장 값비싼 부위다. 결국 중국에서 갑부가 되려면 공산당 지도부와 친분이 필요하지만, 언제 가는 그 지도부에 모든 걸 내놓아야 한다는 게 이 기사의 결론인 셈이다.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권이나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면 재벌 또는 갑부들의 위상 역시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승승장구하던 기업 또는 개인이 정권이 바뀌면서 몰락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쫓겨나다. 귀한 요리 재료인 푸아그라는 거위의 ‘살진 간’으로, 거위의 몸에서 가장 값비싼 부위다. 결국 중국에서 갑부가 되려면 공산당 지도부와 친분이 필요하지만, 언제 가는 그 지도부에 모든 걸 내놓아야 한다는 게 이 기사의 결론인 셈이다.
중국을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앞으로 50년간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홍콩 외부의 법률 집행기관들이 홍콩 내부에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따라서 중국이 홍콩에 공안을 보내 사오젠화 회장을 납치한 것은 애초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	불명명으로 정권이 무너진 지금,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재벌 총수들이 특혜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은 이들 역시 중국 갑부처럼 ‘살진 거위’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업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지하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권력과의 친분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갈린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기업’의 또 다른 이름은 ‘고용’이고, 푸아그라 빠진 기업의 피해자는 결국 ‘일자리가 절실한’ 서민일 수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홍행기 사회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